

# 정전협정과 한국의 안보정책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 1. 머리말

지난 4월 16일 한 미 양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공동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18일 외교부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동 제의를 「검토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북한은 4자회담의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여전히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우, 이종혁 등 북한의 고위 경제정책담당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대북경제 제재의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또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의 공동발굴 및 송환문제에 합의하였으며 미사일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94년 4월 28일 정전협정체제를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그 대신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5.24)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군 대표의 철수 실현(94.12.15),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의 폐쇄(95.5.3) 등을 통해 정전협정을 死文化 無實化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금년에 들어서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체제 파괴의도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즉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양자간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2.22)하는 한편, 비무장지대(DMZ) 불인정 선언(4.4)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중대규모의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바 있다. 그리고 5월에는 소수의 무장군인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였으며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므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2. 정전협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휴전협정으로 알려져 있는 정전협정을 북미 양자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한의 논리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는 다르다. 오늘날 평화란 단지 무력충돌과 갈등의 해소나 군비감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착취상태, 사회정의의 실현, 억압적 폭력의 제거와 인권의 확립 및 보장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란 소위 「제국주의자」 및 「부르조아평화주의자」를 제거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평화는 계급적 혁명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해하고 주장하는 평화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둘째로 북한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한국측이 서명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미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 논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事實 및 국제법의 논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전쟁의 교전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은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기측이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의도하는 정전협정체제의 현실을 들어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오늘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데에 있다. 즉 북한은 식량난 및 경제난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북자의 증가, 북한사회내에서의 일탈행위의 증대 등 체제유지능력의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이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 및 갈등관계를 조성 유지함으로써 일종의 神政體制(theocracy)이면서 폐쇄적 병영국가인 북한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지도부의 정책은 독재자가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면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지난 4월 16일 한 미정상외교장관의 제주선언에서 명백히 재천명되었다. 즉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



기 이전에는 현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주도적 해결원칙을 지적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당연히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당연히 남북한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논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서 인정하였듯이 현재의 남북한관계는 정전상태이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아니다. 공고한 평화상태는 단순히 평화협정의 체결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은 현재의 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바로 평화체제의 구축이 남북한이 주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정부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이 유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한이 상호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협력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속에서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의 회복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야말로 실천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평화체제의 구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평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한이 상대방의 평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점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문제가 바로 안보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세기 이상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이 만나기는 커녕 서로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먼저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기본합의서」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듯이 남북한간에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쌓는 것이 바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 3. 한국의 안보정책

북한은 앞으로도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DMZ내 중 소규모의 무장병력 및 중화기 투입, 진지구축공사, 서해 5도 인근해역에서의 소규모 군사 시위, 군사분계선 DMZ 남측지역에 대한 부분적 침범 등 다양한 형태의 무력시위를 간헐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인 도발행위가 남북간의 대규모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남북간의 우발적인 접촉사고를 계기로 한 위기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예상을 전제로 한다면,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어떠한 유화정책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우선 북한의 주장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제의된 4자회담에 대하여 북한측의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한 미간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남북한 신뢰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강력한 한 미연합방위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방위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러한 시기가 도달할 때 까지 한국은 유엔사 및 한 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정전협정이 준수되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의 잠정적 유보라는 카드로 미국에 접근하면서 유엔사와 한 미연합사의 위상변경을 위한 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의도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 이후 새롭게 편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질서 속에서 우리의 안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 미 안보협력관계가 지역적 차원의 안보협력을 고려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안보정책은 무엇보다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인 통일을 뒷받쳐 주는데 중점을 두면서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질서의 관리에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방위정책의 핵심은 통일과정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남북한 통합을 유인하는 굳건한 능력의 확립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는데 있다. ♣